

1.

인간이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된 것은 대규모 협동을 조직할 수 있는 도시(국가)를 만든 데에서 비롯되었다. 도시(국가)의 등장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이로써 자연의 변덕에 찢쩍매던 인간은 '자연의 제작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명이 도시화 혹은 (도)시민화의 뜻을 담은 civilization이라고 표기된 것은 의미 깊다.

도시의 발전과 국가의 역할을 통해 인간의 지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조건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의 기초로 바꿔낸 것, 즉 신민/시민/국민을 국가로 통합해내는 인위적 '체계의 원리'를 통해 구현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 그것이 세습의 원리든, 가문의 원리든, 선출의 원리든 - 민심/민생을 중시하겠다는 공적 약속의 체계로 작동한 것에는 달라짐이 없었다. 지금도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로 국가 운영자를 선출하면서 그(그들)에게 국정기획, 국가발전전략을 약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한다.

국가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 '인간의 사회체계'를 상징한다. 덕분에 인간은 - 나약한 각자의 신체 조건으로는 꿈꿀 수도 없었던 - 자연 속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 국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자연을 가장 많이 훼손한 존재다. 국가는 전쟁을 낳았고 전쟁을 통해 더 강해졌다. 그때마다 국가는 인권, 정의, 개발을 앞세웠다. 1차 세계대전이 전간기 민주주의의 폭발을 낳고 2차 세계대전이 전후 민주주의라는 황금기를 낳았듯이, 민주주의의 확산조차 전쟁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발전이나 GDP 성장과 같은 개념 역시 국가 없이 존립할 수 없다. 무슨 분야 세계 몇 위, OECD 몇 위 같은 개념도 국가 없이 사용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녹색성장국가'는 확고한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자 역설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성장이며 어떤 국가인지, 나아가 국가와 성장 속에서 어떤 녹색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볼게 하는 출발점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숙고할 때다. 그 긴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는 그 긴 시간을 누가 지배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2.

고대 헬라인들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의 길이(크로노스)만이 아니라 손에 쥐게 될 기회나 역량(카이로스)을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신이 부여해준 자유의지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즐겼다. 로마인들은 시간을 '모든 진리의 아버지'라고 보면서 결과물 기다리지 않고 과정을 주도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을 자신들의 기백이라 여겼다.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미국인들 역시 '신은 우리가 하려는 사업을 좋아하신다(ANNUIT COEPTIS ; God has favored our undertaking)'고 여기고 연방헌법과 연방정부를 만드는 일에 나섰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개선해 온 방식은 자기애에 연연하는 인간들조차도 공공선을 존중해야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있었다. '사익의 존중이 공익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 긴 노력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입헌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고, 누구든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 입법을 할 수 없다는 자유의 원칙을 통해 공화주의의 기초를 닦았으며, 여성과 노동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입법자로 파견을 권리를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길을 넓혀갈 수

있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의의 결과가 아니라 선의를 복돋는 인위적 노력을 제도화한 덕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역시 인간은 날개 잃은 천사이며 우리의 선한 의지는 기껏해야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는 실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하루 가운데 절반의 우리 마음은 지옥이다. 타락으로부터 면제받은 인간은 없다. 퇴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사회도 없다. 누구도 무국가 식민 상태나 난민의 삶을 권하지 않는다. 통치 없는 무정부 상황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폭력을 찬양하는 철학은 없다.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지만 전쟁을 줄이고 막는 것도 국가의 일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길 바라는 시민은 없지만, 누구도 정부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을 수는 없다.

싫든 좋든 국가는 인간 삶의 일부이자 자연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자연을 훼손한 것도 국가지만 자연을 복원하는 역할도 국가를 통제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국가가 그 사회 국민/시민의 모습을 집약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국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생태적 의제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깊이 사색되어야 할 문제다.

3.

국가를 통제할 민주적 선의는 집단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그래야 서로의 용기를 복돋으며 선한 의지가 흥하고 그렇지 않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가를 선용하되 동시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실력을 키우는 노력 없이 달라질 것은 없다. 국가를 통제하고 선용하는 기예, 그것을 정치라 한다.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에 속함 없이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일 것이라고 말한 이는 2,500여 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자유는 공적 역할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토머스 홉스는 국가에 속하고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렵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치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어떤 인간사회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내전(civil war)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때 이후 정치학은 참여가 다가 아니라 매개된 참여, 책임 있는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시리아나 예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사례에서 보듯, 오늘날에도 정치의 실패가 만들어내는 시민들 사이의 비극적 전쟁의 사례는 도처에 늘 있다. 지금 투표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꺾을 수 있다는 미국의 현실이나, 정치해서는 안 되는 국가기구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 민주주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는 실패할 수 있다. 국가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시민은 언제든지 이런 결과에 직면하고 또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국가를 버리고 자연으로 갈 수 없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의 교의는 없다. 무엇이 좋은 정치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 논쟁적이고 갈등적이다. 정치학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지표는 조직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보수는 조직을 혐오한다. 정부를 불신하며 작은 정부를 중시한다. 대신 의식 있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중시한다. 사회복지체제를 강화하고 조세를 늘리는 집단적 접근 대신, 자선과 봉사, 기부가 더 선한 개인 의지임을 상찬한다. 규제 완화나 탈규제, 민간으로의 이양, 개인 권리의 강화를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한다. 개인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의 다른 짝은 국가의 발전이다. 보수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국가를 숭배한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발전 사이에 있는 정부와 정당, 국회를 싫어한다. 노사관계나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같은 결사체의 역할도 싫어한다. 반(反) 정치주의 그리고 집단이기주

의에 대한 거부는 그들이 즐겨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다.

진보는 기업이 아니라 정치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한다.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가 그 사회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조직화의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이익과 열정이 있는 곳에 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적인 정치학의 핵심 교리다. 조직의 역할 없이 가난한 민중의 권익을 신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정부다.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고 계층 간 불평등을 줄여가는 노력 없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조직도 정부도 악용되면 큰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수단을 선택하는 실력에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은 진보의 변함없는 특징이다.

가난한 시민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민주주의가 인간을 보호하고 자연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달라진다. 좀 더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 가난한 시민이 모멸 받지 않는 좀 더 평등한 사회가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여성과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도 크다. 가난한 시민의 권리가 커질수록 평화에 대한 관심도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진보적인 정치의 오랜 가치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 때 정부나 정치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산층이라 불리는 우리사회의 교육받은 도시민들은 정부나 정치의 역할을 늘 불신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론 작은 불편함에 직면해서도 그 책임을 정부나 정치에 추궁하는 데 무서울 정도로 매몰차다. 그간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는 기존 주거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5천만 원 미만 주택의 소유자를 완전히 내몰아내고 들어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역구 선거를 지배한다. 여야 출마자들을 자유롭게 소환해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게 한다. 지방의 선거구 역시 지역개발 예산 확보를 최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지배한다. 우리사회의 가난한 보통시민들이 점차 권리를 잃어가는 대신 중산층의 과도한 영향력이 심화되는 현실을 두고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참여가 아니라 평등한 참여를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목소리 작은 약자나 가난한 시민을 절망에 빠뜨린다.

보수만이 아니라 진보도 역할을 더 잘 하는 민주 정치.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들도 좋은 경제의 중심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민주 사회 없이 성장과 발전을 향해 세상을 치닫게 만드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힘은 제어될 수 없다. 그저 투표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시민이 아니라 당원, 조합원, 회원, 활동가, 대표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이름을 가진 시민이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도 살고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산다.

4.

지난 세기 우리는 세 유형의 정치체제를 경험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갖는 특징과 장점을 다른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단순화해서 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전체주의는 속도전(전격전/총력전) 체제다. 국민 모두를 주체로 만들어 일치단결/일심단결(Gleichschaltung)의 지향을 갖게 하려한다는 점에서 일원주의 체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일상을 정치화하려 했고, 이를 대중운동 방식으로 전개했다는 점도 특별하다.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단체, 조직, 정당만 인정한다. 이견과 갈등의 다원주의는 전체주의의 적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열정을 하나의 가치체계 안으로 동원해 최강 국가, 최우수 민족이 되는 목표를 가졌던 체제다. 그들이 볼 때 다원주의와 그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는 굵뜨고 유약한 체제일 뿐이다.

둘째, 권위주의는 일종의 추격전 체제다. 근대화/산업화를 목표로 한 발전국가다, 대개 그들은 수출과 기술에 목숨을 건다. 수출입국(輸出立國), 기술입국(技術立國)은 권위주의의 체제 이데

올로기다. 전체주의와 다른 것은 대중의 정치화 대신 탈정치화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대신 모두를 경제-발전주의에 몰입하게 한다. 경제우선주의는 권위주의의 생명이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반공국가다. 반공주의란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권위주의가 '두려움의 동원'을 통해 체제를 운영하는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다. 반공주의란 문제의 원인을 체제 밖에서 찾고 문제의 해결 역시 체제 밖으로 밀어내는 특별한 사유의 체제를 뜻한다. 사회적 갈등과 이견, 불만과 저항을 잘못된 체제 내부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는 위협의 차단을 역설하고 배제와 예방을 강요하는 국가로 상징된다. 이를 위한 위기론은 상시 동원된다. 뒤처지면 안 되고 수출 못하면 큰일 난다는 협박 담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체제, 그것이 권위주의다.

셋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견과 갈등을 없애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제도화하려는 데 있다. 갈등의 제도화, 갈등의 선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복수 정당, 권력의 분립,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숙려·심의를·공청·조정·합의를 절차화 통해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숙고된 결정을 이끌고 다름과 차이 속에서 합의된 변화를 도출하며, 이를 통해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지향하는 체제다.

전체주의는 사회를 일치된 의견으로 이끌 때 장점이 발휘된다. 권위주의는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 우선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자 하는 합의를 종용할 때 힘을 갖는다. 민주주의는 다르다. 합의는 사전에 주어질 수 없으며 민주적 정치과정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정을 거쳐 적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심의와 숙의는 물론이고 조정과 타협의 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주도하는 적법한 시민 대표가 복수의 정당과 의회정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일정한 임기를 주기로 반복해서 선출되고 책임성을 부여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민주주의는 일종의 혼합정체(mixed polity)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주의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불온시하지만, 민주주의에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상존한다. 민주적 전체주의, 민주적 권위주의는 성립할 수 없지만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나빠질 때마다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전체주의가 발원했고 4월 혁명과 2공화국 뒤에 군부권위주의가 이어졌듯이 민주주의 하에서도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는 경제우선주의와 일치된 국민-국가를 외칠 때마다 스멀스멀 우리 사이로 들어온다.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 되려면 더 다원적이어야 하고 더 느려져야 하며, 이를 인내하고 관용하는 차분한 시민성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

5.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필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일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겠다. 정치에서 이견을 말하는 것은 비난을 감수할 일이 되었다. 협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은 원칙의 후퇴로 공격받는다. 과거 권위주의 때는 이견을 억압하며 속도전을 주도한 것은 행정부 쪽이었다. 지금은 국회 쪽이 더 심하다. '절대', '당장'과 같은 센 언어를 앞세우며 상대를 다그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혁성과 정당성을 과시한다. 모든 게 급하고 모든 게 싸움이다.

입법도 급하게 함부로 한다.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의 20배, 독일의 60배, 영국의 90배를 상회한다. 우리보다 인구가 7배 가까운 미국에 비해서도 2배가 되고, 일본보다는 60배가 넘는다. 법안 가결/반영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소 21배(미국과 비교)에서 최대 172배(영

국과 비교)에 달한다. 그런데도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모두가 나서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안 한다면 더 급하게 일하라고 야단이다. 아무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천천히 제대로 일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전체주의나 권위주의는 무슨 일이든 빨리하는 장점이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일이든 빨리 못하게 할 때 가치를 갖는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든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될 때까지 평균 입법 소요 기간은 300일 가까이 걸린다. 권위주의는 통치자의 명령으로 일하지만, 민주주의는 합의를 통해 일한다. 숙려기간도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적 요구도 들어야 하며, 여야 사이는 물론 행정부처와의 입장 차도 조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약한 체제가 아니다.

전체주의와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밀렸지만, 결국 승리한 쪽은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 스탈린 체제나 히틀러 통치하에서 산업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지만, 비교의 기간을 조금만 길게 잡으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웠다. 그 비밀은 다르고 느린 것의 다원적 가치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넓은 협력과 더 깊은 신뢰를 만들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자의 실력은 조급함과 독주를 제어할 때 발휘된다. 느리게 살 수 없으면 협동의 가치는 구현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존재를 고려하는 일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느리게 살 수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력 없이 매사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모두가 자신의 성과 목표, 성과 관리, 성과 평가서를 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자신이 정한 성과 계획을 맞추지 못할까 봐 자신을 못살게 굴어야 한다. 속도전의 내면화라고 할까, 모두가 피곤하고 지쳐가는 사회다. 모두가 억울해하고 모두가 성마르게 모두가 화를 내는 사회다.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아파트 현장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 가운데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인 53%보다 훨씬 높은 66.8%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 해 7월 아파트 공급 규모에 비해 올해 7월에만 4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 사회는 뭐든 오래 준비하는 법이 없다.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는 방법은 죽어라 빠른 속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안전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과거처럼 타율적 강제가 아닌데도 공기(工期)를 맞춰야 한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빨리 끝내야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논리로 과속을 감수한다.

모두를 시간에 쫓겨 살게 만든 이상한 민주사회가 우리 앞에 있다. 속도전 경쟁으로 치면 세계 최강 국가다. 경쟁 부문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국가 K'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7위의 우주강국이 되고, 세계6위의 군사대국이 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를 넘어서고 잠재성장률에서 일본을 제치고, 이코노미스트지(誌)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발전지수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겼다고 법석이고, K팝·K뷰티·K드라마로 이어지는 시리즈에 국민배우·국민가수·국민엠시·국민드라마 시리즈가 나란히 가는 동안 자살, 산재사망, 가계부채, 남녀 임금격차, 이혼 증가, 낙태, 사교육비 지출 등의 어두운 현실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다.

2001년 시작해 2021년 끝난 아프간 전쟁에서 민간인 포함 17만2,000여 명이 사망했다. 같은 20년 동안 한국의 자살자는 24만여 명이나 되었다. 속초나 남원처럼 인구 8만 명 수준의 지방 도시 세 개가 사라질 규모다. 민주주의가 속도전을 동반하면, 전쟁 이상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느리더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 사회 속 약자들의 말 없는 절규치고는 참혹하다. 느려져야 다른 게 보인다. 멈춰서 찬찬히 돌아볼 수 있어야 자연의 시간을 다투아갈 수 있다.